

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

정책실명제 등록번호	2013-06	담당부서 작성자	예산실 지방재정팀 김만태사무관044-215-7572 /mtkmtk@mosf.go.kr)
정책명	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"> <p>□ 추진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○ 중앙-지방간 기능 조정을 전제로 지방재정의 현안소요*와 재원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취득세수 감소 보전, 보육·복지소요·분권교부세사업 부담 완화 등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그간의 지방재정 관련 현안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의 반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 ▪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(보육 보조율 +20%p) 문제 해결 ▪ '09년 합의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논의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방소비세(부가세의 5%) 도입시 '13년말까지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관계부처 합의 ▪ '15년 이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'15.1.1일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규정 ▪ 중앙-지방간 「기능」 개편에 따른 재원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이양 및 보조사업 개편 필요 </div> </div> <p>□ 추진방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추진 (기재부, 안행부, 국조실, 복지부, 교육부 등) ○ 국회·지자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병행 		

□ 추진경과

- '13.1월,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시,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건의
 - * 주요 건의사항: 지방소비세 인상(5→20%),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(50→70%), 분권교부세 3개사업(노인·장애인·정신요양시설) 국고환원 등
- 국조실 2차장 주관 관계부처 T/F('13.4.29~6.17)
 - * 국조실, 기재부, 안행부, 복지부, 교육부 1급
 - ** 국조실, 기재·행안부 과장급, 조세(연), 지방행정(연)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진행
 - 총 8차례에 걸쳐 국장급회의, 실무자회의, 지자체 회의,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
 - * 관계부처 국장급회의(5.29, 6.13), 실무자회의(5.3, 5.10, 5.28, 6.7), 지자체 관계자 회의(5.13), 전문가 회의(5.7)
 -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향후 4년간('14~'17) 지방소요액과 자체 확보가능 재원 등을 중심으로 필요재원 규모 분석
- 기재부 2차관 주관 관계부처 T/F(7.29, 7.31, 8.2, 8.6)
 - * 안행부, 복지부, 국조실 1급
 - 취득세 보전 규모 및 각 쟁점별 소요 금액* 합의
 - * 영유아보육 보조율 인상, 분권교부세 환원 등
- 부총리 주관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(8.11, 8.18, 8.22, 8.24, 8.25)
 - * 안행부장관, 복지부장관, 국토부장관, 국조실장 등 참여, T/F이후 진여쟁점 협의
 - 중앙-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패키지(안) 합의
 - * 취득세 인하율 및 전액보전 방침은 전월세대책 발표(8.28)시 발표
- 국회 예결위 예산재정개혁특위(3.22~9.30)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논의 및 권고안 의결(9.30)
 - * 특위위원, 정부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개최 (전체회의 9.3, 9.12, 9.30, 간담회 8.19,, 8.28)
- 시도부단체장 간담회(9.9, 9.16),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(9.10) 등 지자체 협의
-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(9.24)

○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

- 최초 입안자 : 관련부처 협업 과제로 수행
- 최종 결재자 : 관련부처 협업 과제로 수행

- * 관련부처 : 기재부, 안행부, 국조실, 복지부, 교육부
- * 기재부 담당부서 : 예산실 지방재정팀 (팀장 이용욱)

○ 사업 관련자 (기재부)

구분	성명	직급	수행기간	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
부총리	현오석	부총리	'13.4~	기재부 업무총괄
제2차관	이석준	차관	'13.4~	기재부 업무 부총괄
예산실장	방문규	고공단	'13.4~	예산실 업무 총괄
행정예산심의관	진양현	고공단	'13.4~2	행정예산업무 총괄
행정예산과장	오상우	4급	'13.4~5	지방재정업무 총괄
행정예산과장	조용범	4급	'14.3~	지방재정업무 총괄
담당	류승수	5급	'13.4.~5	지방재정 업무
지방재정팀장	황순관	4급	'13.5.~6	지방재정업무 총괄
지방재정팀장	이용욱	3급	'13.7~3	지방재정업무 총괄
담당	오지훈	5급	'13.5~3	지방재정 업무
담당	권오봉	5급	'13.5~3	지방재정 업무
지방재정팀장	신민철	4급	'14.3~	지방재정업무 총괄
담당	마용재	5급	'14.3~	지방재정 업무
담당	김만태	5급	'14.3~	지방재정 업무
담당	이상일	6급	'13.8.~	지방재정 업무
세제실장	김낙희	고공단	'13.6~	세제실 업무 총괄
조세기획관	한명진	고공단	'13.6~	조세기획관실 업무 총괄
조세분석과장	김경희	4급	'13.6~3	지방세제 개편 총괄
담당	조용래	5급	'13.6~3	지방세제 개편 업무
담당	최종호	6급	'13.6~3	지방세제 개편 업무
조세분석과장	박금철	4급	'14.3~	지방세제 개편 총괄
담당	최진규	5급	'14.3~	지방세제 개편 업무

정책수행자
(관련자 및
업무분담
내용)

다른 기관

소속	직위	성명	직급	수행기간	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
안행부	장관	유정복	장관	'13.4~	지방재정 조정방안
	지방재정 세제실장	이주석	고공단	'13.4~	지방재정 조정방안
	지방재정 정책관	정정순	고공단	'13.4~	지방재정 조정방안
	지방세제 정책관	배진환	고공단	'13.4~	지방세제 개편
	재정정책 과장	이용철	3급	'13.4~	지방재정 조정방안
	지방세 정책과장	조규일	4급	'13.4~	지방세제 개편
	담당	서은주	5급	'13.4~	지방재정 조정방안
복지부	장관	진영	장관	'13.4월 ~9.30	보육료 보조율, 분권교부세 등
	기획조정 실장	전만복	고공단	'13.4~	보육료 보조율, 분권교부세 등
	정책 기획관	장재혁	고공단	'13.4~	보육료 보조율, 분권교부세 등
	재정운용 담당관	장호연	4급	'13.4~	보육료 보조율, 분권교부세 등
	담당	최경일	4급	'13.4~	보육료 보조율, 분권교부세 등
교육부	장관	서남수	장관	'13.4~	지방교육재정
	기획조정 실장	성삼제	고공단	'13.4~	지방교육재정
	지방교육 지원국장	정병걸	고공단	'13.4~	지방교육재정
	담당	박창원	5급	'13.4~	지방교육재정
국무 조정실	국무조정 실장	김동연	장관	'13.4~	관계부처 조정
	2차장	고영선	차관	'13.4~	관계부처 조정
	경제조정 실장	류충렬	고공단	'13.4~	관계부처 조정
	재정금융 기후정책관	송준상	고공단	'13.4~	관계부처 조정
	담당	김영민	4급	'13.4~	지방재정 관계부처 T/F운영

추진실적

㉠ 중앙-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마련 발표(9.26)

- 관계부처·국회·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세입 여건, 재정 건전성 및 국가채무,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-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지방재정의 현안소요*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

* 취득세수 감소 보전, 보육·복지소요·분권교부세사업 부담 완화 등

《조정 방안 주요 내용》

① (지방세제 개편)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

-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%p 확대
(현재 부가가치세수의 5% → '14년 8% → '15년 11%)
-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, 실질적인 과세자주권 확충

② (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 신장효과 등) 복지소요에 우선 활용

-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(연 1.1조원) + 기타 현행소요보다 추가 지원분(연 0.4조원) : 향후 10년간 연평균 1.5조원 추가 지원
- 동 재원은 기초연금, 보육료 등 향후 복지소요에 우선 활용

③ (보조사업 확대 등 국가예산 지원) 시급한 현안 대응

- 보육 보조율을 10%p 인상*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* 서울은 실질적으로 40% 수준 지원
- '15년부터 정신·장애인·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(분권교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)
-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등 '14년 한시적 부족소요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

④ (기능 조정) 지방 세출 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

- 기능이양,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되,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'15년 시행

《조정 방안 기대 효과》

- 향후 10년간('14~'23) 연평균 5.0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복지부담 완화
- 취득세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방의 자체 재원조달 능력 및 과세자주권 강화
- 기능이양 및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

《중앙-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요약》

◇ 지방재정 소요

○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

-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
-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
- 분권교부세 3개 사업(장애인·정신·양로) 부담 완화

◇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: 5.0조원

○ 지방세제 개편 : 4.6조원

-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(3%p+3%p) : 2.4조원
-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: 1.1조원
- 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: 1.1조원

○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: 1.5조원

- 보육 보조율 인상(10%p) : 0.8조원
- 분권교부세 3개 사업(장애인·정신·양로) 국고 환원 : 0.6조원
- '14년 한시 예비비 1.2조원 : 10년간 연평균 0.1조원 지원 효과

○ 기능 조정 : △1.1조원(잠정)

② 지방소비세 전환을 확대, 보육료 보조율 인상 등
'14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사항 반영

③ 발표된 정부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

○ 국회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 설명 및 언론기고 등을
통한 일반 국민 등과 소통 제고

* 김기선 의원 취득세인하 정책토론회 2차관 참석(9.3) 등

* 전문가 기고 : 지방균형재정보다 지방분권이 우선(현진건교수,
6.30 세계, 9.11 한경), 지방재정 개편과 성공적인 지방자치(원윤희
교수, 10.11서울신문)

○ 취득세율 인하, 지방소득세·지방소비세 개편 등 관련법
개정 및 예산안 국회 통과 추진 (10~12월)

○ 지자체별 자원배분, 법안 개정 등 추진상황 점검 및
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추진점검단
(기재부 2차관주재) 운영 (10월~, 10.24. 1차회의 개최)

< 법률 개정 필요 사항('14년) >

구 분	관련 법률	비 고
· 취득세율 영구 인하	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	
· 지방소비세 전환을 확대	지방세법 (지방세법시행령) 부가가치세법	- 구체적 배분방식은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
·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	지방세법 (지방세법시행령)	
· 지방소득세 개편	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	-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, 법인세분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 정비

* 분권교부세 및 보조사업 개편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법, 균특법
개정 등은 '15년 시행